# 영호남 10개 지자체 달빛내륙철도 힘 모은다

〈광주~대구〉

## 오늘 대구서 '철도 건설 경유지자체 실무자 협의회'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대응방안·조기건설 해법 모색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해 광주시와 대구시 등 영호남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20일 광주시는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2019년 달빛 내륙철도 건설 경유지자체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달빛내륙철도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비한 경제성 분석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한 논리개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해 7월 착수한 자체 연구용역 경과 보고와 향후 추진사항을 협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한 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 등 경유지 10개 지자체 실무자가 참석해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을 나눈다.

또 이들 지자체들은 회의에서 지난해 7월부터 대구·광주시가 예산을 부담해 발주한 달빛내륙철도 건설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배경과 논리를 공유하고 사업방향 토론을 한다.

특히 조기건설 해법을 찾기 위한 의견을 모으고 올해부터 국토교통부가 검토하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대응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가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경유지자체 협조사항을 논의한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은 대구~광주간 191.6㎞ 구간을 최고시속 250㎞로 달리는 고속철도로 연결해 영호남 1시간 생활권을 형성하는 철도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영호남의 상생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 국비에 사전 타당성용역 수립비 5억원이 반영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철도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영호남 내륙도시 간 연결로 산업구조 연계 등 일자리 창출과 관광특화 사업추진 등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 분위기에 맞춰 남북철도와 달빛내륙철도 연계를 통한 향후 남북 경제협력사업 전체효과를 제고해 영·호남까지 수혜지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북구·새마을부녀회 교복나눔 장터** 20일 광주 북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교복나눔 장터'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학기를 앞두고 교복을 고르고 있다. 광주 북구와 새마을부녀회가 나눔 문화 확산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복나눔 장터에서는 셔츠, 블라우스, 바지, 치마, 조끼가 2000원에, 재킷이 5000원에 판매됐다. 수익금은 전액 (재)광주북구 장학회에 기탁할 계획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시립예술단 활성화·시정 청렴문화 확산 등 제시

## 광주혁신추진위 2차 혁신안

광주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주정민)는 20일 광주시립예술단 활성화와 시정 청렴문화 확산, 용역수행의 생산성 제고 등을 2차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광주혁신추진위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차 시정혁신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는 광주시립예술단이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 문화예술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중장기 발전목표 설정과 대표 브랜드공연 육성, 시립예술단 경쟁력 강화, 문화복지 선도 및 대시민 서비스 역량 강화 등 4대 기본방향 10개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시립예술단 경쟁력의 핵심인 예술인재 확보를 위해 예술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계약임기제 등 유연한 인력운영 시스템을 도입토록 했다.

시정 청렴문화 확산 분야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 공무원 취업 및 수익행위 엄격 제한, 상향식 책임 강화, 관행적 부조리 청산, 공무원의 사익추구 금지,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강화 등 6대 기본방향 19개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또 시정 용역수행의 생산성 제고 분야로는 용역심사의 내실화와 공무원 정책역량 강화, 용역전반에 대한 평가체제 강화 등 3대 기본방향과 6개 혁신과제가 발표됐다.

용역남발을 막기 위해 용역과제 심사 시 외부전문가의 사전 심의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외부용역은 법정의무용역, 기술용역, 예비타당성 신청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으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정민 위원장은 "제2차 시정혁신안에 대해 광주시가 상반기 중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토록 하는 등 이행과정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며 "민선 7기 광주의 변화를 선도할 혁신 구심체로서 분야별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블루오션 개척 청년 수산양식어업인 키운다

## 전남도 월100만원씩 2년 지원

전남도는 블루오션인 수산양식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에게 1명당 최대 월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양식어장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산계 학교를 졸업한 전문 인재에게는 양식기술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양식업체에는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양식업 일자리 사업이다.

전남도는 청년세대 초보 양식어업인의 지역 정착을 위해 수산계 학교 졸업 전문인력을 채용한 양식업체에 1명당 매월 급여의 50%, 최대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 올해 전남지역 18개소 양식업체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양식업체에서는 전국 수산계 고교·대학교에서 기초 양식기술을 익힌 만 39세 이하 청년을 최대 2년간 채용하고 급여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전남지역 수산계 학교는 매년 양식어업 분야 전공자 130여 명을 배출하고 있으나, 낮은 보수와 복지 문제로 인해 관련 분야 취업률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양식어장 청년일자리 사업을 도입했다.

앞으로 양식업 청년 취업자에게는 양식기술 교육, 첨단 양식 현장 탐방, 창업어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해 전문가로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또 양식업 창업을 위한 보조 사업자로 선정해 정부시책 혜택도 늘려갈 방침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국회서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 방안 토론회

전남도는 20일 국회에서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경상남도, 국회 도서발전연구회(대표 박지원 의원)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사)한국글로벌섬재단,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사)섬연구소, (사)도서학회 등 국내 섬 관련 기관, 단체와 섬 전문가, 섬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섬 발전 추진대책'에서 언급됐다. 섬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종합적·체계적 섬 정책 추진 체계 마련과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종합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는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의 필요성과 역할',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섬 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섬 전담 국책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신순호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강봉룡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 강제윤 (사)섬연구소장, 손쾌환 경남 통영시의원, 채동렬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는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황주홍(민주평화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윤영일(민주평화당)·서삼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상규(자유한국당) 국제법제사법위원장, 김한표(자유한국당)·홍일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지역과 당적을 가리지 않고 참석해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의 설립 분위기 확산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나타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토론회에서 "세계에서 섬이 4번째로 많은 국가임에도 섬 개발과 보존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국가 차원의 전담 연구기관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 '시민권익위 구성·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광주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시민소통정책의 본격적인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20일 "시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비롯해 시민참여형 민주적 시민소통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 시민권익위 구성·운영조례는 시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비롯해 시민권익위 구성과 임기, 그리고 시민권익위 운영과 더불어 분과위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통한 정책제안 실행방안 마련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정책 검토 및 의견 제시 ▲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추진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